野, 이태원 국조 압박…한덕수·이상민·윤희근 파면도 촉구

"與, 끝까지 국정조사 거부하면 오늘 요구서 제출"
"수사·국조·특검 동시에 진행된 경우 차고 넘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도 거듭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한다면 정의당, 무소속 의원과 힘을 모아 국민이 명령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9일 제출해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 검찰, 공수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 이미 수사, 국정조사, 특검이 동시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서 나름 사과했다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 모두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 뿐"이라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상식 밖이다. 납득이 안 된다'며 반말로 호통치듯 험악하게 경찰을 다그쳤지만 정작 이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을 가리려 참사의 책임을 경찰 선에서 꼬리자르려는 것에 더해 경찰 손보기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한 총리의 외신기자회견에서의 부적절한 처신, 다수 국민이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로 생각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대로 놔둔 채 '한 놈만 팬다'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만 책임을 묻는 게 맞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검찰총장이 아니다"라며 "어제 점검회의에서의 모습은 이번 참사의 최종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는 꼬리자르기로 끝내서도, 끝날 수도 없는 사안"이라며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 파면 요구가 정치적 공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 석고대죄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 도리이건만 책임 회피에 급급한 후안무치한 정권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파면 요구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희생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이 10·29 참사에 대해 마지못해 찔끔 사과하더니 말단 경찰서 대상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진실로 이 참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선 한 총리를 해임하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장차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은 없고 말단 경찰 탓만 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참사를 막을 수 있던 골든타임에 아무 조치를 하지 못한 지휘 책임자들인 한 총리, 이 장관,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더 이상 축소·은폐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라. 무사안일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상민 서울시장도 말로만 때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 국민의힘도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범야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만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리는 상황인 만큼 그런 상황 가정해 드리는 말씀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임형석 도의원, 출산지원정책 확대 촉구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은 최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출산지원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 출생아 수는 2017년 1만 2,354명, 2018년 1만 1,238명, 2019년 1만832명을 기록했다. 2020년 9,738명으로 출생아 수 1만 명 선이 무너진데 이어, 2021년은 8,430명을 기록했다.

2021년 정부가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는데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곳이 포함됐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임형석 의원은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자녀행복카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다자녀행복카드'는 전남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경우 발급되고, 교육, 주유, 영화, 서적 등의 업종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원비 할인 혜택이 필요한데 13세 이하만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자녀행복카드' 대상 연령 상향 방안과 실질적인 할인혜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은 감면 대상을 구분하지 말고 전 도민이 감면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민간시설 이용자는 공공산후조리원 감면혜택 만큼 개별지원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심철의 광주시의원,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 강화' 주장

"학교 교사, 응급상황 발빠른 대처 위해 교육강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광주지역 학교 교직원들의 응급처치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은 8일 광주 서구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골든타임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학교 현장은 집단이 모여 있는 곳으로 대형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생을 비롯해 교사·직원들도 응급조치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는 야외수업이 많고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교직원이 응급처치를 담당해야 한다"며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CPR)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20년 3월 응급처치 활동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시교육청은 관련 시책을 매년 일선 학교에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응급처치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생의 경우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교직원은 이론 1시간, 3시간 실습 형태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처치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며 "응급처치의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일선 교사와 직원들이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